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진상 규명 기대” 속 “활동 제약 우려”

조사 기간 최대 2년 연장...역울함 풀도록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 중앙위 심의·의결 미온적 태도...탄핵정국에 위원 대거 공석 문제 조사 속도 낼 개선 방안 만들고 배·보상 등 총괄할 재단 설립 필요

여순사건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중단될 뻔했던 진상규명 활동을 최장 2년동안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사의 장애요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조사기간을 최장 2년(진상조사 기간 1년 연장,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 조사 기간을 지난 10월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던 것에서 벗어나 위원 15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해 여순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사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순사건위 중앙위원회(중앙위) 차원에서 심의·의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진상규명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여전히 숙제다. 여순사건위는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사건을 중앙위에 전달하면, 중앙위에서 다시 한번 사실조사를 한 뒤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위는 지난 2년 동안 회의를 10차례밖에 열지 않았고, 올해는 6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등 총 두 번 연 것이 전부다. 그 탓에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접수 사건 7465건 중 5496건(73.6%)의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실무위에서 3984건(53.3%)을 검토 처리 완료했지만, 중앙위는 그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84건(25.2%)만 최종 결정 처리하는 데 그쳤다. 중앙위의 한 위원은 “조사관이 지금까지 3명밖에 없어 중앙위 조사, 소위원회 결의, 본회의 결의 등 기간이 오래걸렸다”며 “내년에는 조사관을 3명 더 채용해 조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비효율적인 조사·심의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중앙위는 심의·의결 가능만 갖고 있고,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도 안전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적만 명시돼 있는데 중앙위가 법의 의도와 달리 ‘이중 조사’를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앙위 위원 중에 여순사건 전문 연구자가 한 명

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던 만큼, 개정안에 따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선임할 때는 여순사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문가를 다수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앙위 위원들이 ‘탄핵 정국’으로 대거 공석이 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위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연직 위원 이원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고, 부위원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당연직 위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은 사직했거나 직무정지된 상태다.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인사권이 없어 공석을 채워넣을 권한이 없는 상태로,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위원회 정비도 늦춰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순사건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적 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의결 절차 자체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순사건 조사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진실 규명,

국가 차원의 추모·위령시설 지원·운용을 위한 준비도 시급하다. 배·보상에 대한 대비 또한 긴급한 문제다. 일정한 배·보상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일일이 국가와 재판을 벌여 배·보상을 요구해야 해 시간과 국가 자원의 낭비가 심할까 전망이다. 더구나 유족 대다수가 고령인 터라 자칫 법정 싸움만 하다 배·보상조차 못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구·추모, 배·보상 등 유족 지원 등을 총괄할 재단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고령인 유족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 체계 개선, 시행령 개정 등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순사건의 조사 자체가 다른 사건에 비해 한참 뒤쳐졌던 만큼, 조사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도尹 상대 비상계엄 손배소 제기

원고 23명 1인당 10만원 청구

광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공포·불안과 수치심을 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전국 집단소송이 광주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8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23명으로 광주시민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소송을 담당할 유한별 변호사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 등을 국외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해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게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애련 광주여성변호사회장은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광주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질 소망한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전국에서 원고 1만여명을 모집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진 대피 이렇게 18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난안전교실에서 아이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는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경찰, 지자체·의회 강제수사 잇따라 단행

금품수수·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경찰이 전남 지자체와 의회에 강제수사를 잇따라 단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8일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의혹과 관련, 나주시의회 의원 사무실 등지에 대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A의장 등 기초의원 10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제외됐던 나머지 일부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이날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

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시의원 총 16명(더불어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중 의장 A씨를 포함해 대부분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같은 날 여수시 소재지구 개발 사업 당시 특혜의혹과 관련, 여수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된 증거물을 토대로 택지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2150억원을 투입돼 내년 12월께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 부순 30대 검찰 송치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북부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공중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앞에 조성된 평화의 소녀상 지지대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북구는 소녀상이 파손된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에 나설 계획이며 파손된 소녀상은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재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7년 광주시 북구 주민 약 1600여명과 단체 98개, 상가 200여곳의 모금을 통해 설치됐다. 당시 일본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